국방부 특조위 5·18 발포명령·헬기사격 규명 제대로 하고 있나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는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이건리 위원장(가운데) 등이 12일 오후 광주시 남구 호남신학대학교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기무사 미공개 자료 보니 별다른 내용 없더라" 소극적

헬기사격 관련 "범죄자 진술 절대적 가치 아니다" 신중

조사활동 벌써부터 난항 … 적극적 진상규명 의지 아쉬워

5·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을 풀어줄 것으로 기대했던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건리·이하 특조위)의 활동이 난항을 겪고 있다.

5·18 진상규명을 풀어줄 핵심자료로 기대를 모았던 기무사의 미공개 존안(기록보관)자료에 별다른 내용을 찾지 못한데다, 5·18 계엄군에 대한 진술 조사에서도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조위는 특히 기존 자료 위주로 조사를 펼치고 있지만, 5·18 관련 자료의 왜곡, 폐기, 공소시효 경과 등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에 머물며 헬기사격 조사를 펼치고 있는 국방부 특조위는 12일 광주시 남구 양림동 호남신학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이건리 위원장은 "이번 방문은 헬기 사격을 목격하고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의 증언과 해당 장소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헬기사격 증언자 8명을 만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군인, 의사, 간호사, 군의관 또는 헬기 사격 피해자를 옮긴 시민 등에게 "진상규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과거 검사 시절 범죄자 조사 경험을 예로 들며 "범죄자의 진술은 하나의 증거이지, 절대적 가치를 갖지 않는다"며 헬기사격 당사자 진술에 대해 신중한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그나마 이번 특조위 조사에서 고은 시인이 시 '만인보'에서 "전남여상 3학년 박금희/…/ 기독교병원 헌혈하고 돌아오는 길/ 탕탕탕/ 헬기에서 쏜/…/ 총 맞아/ 거리에 피 쏟아버렸다"고 언급한 고(故) 박금희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점이 눈길을 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고 박금희양에 관한 목격자 진술, 의료 기록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특조위는 지난 1개월간 기무사 자료 위주로 조사를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조위는 기대를 걸었던 미공개 존안자료에서 별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자, 기무사령부(옛 보안사령부)로부터 25권 8000페이지 분량 자료를 새롭게 발굴해 분석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또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과 관련해 미국 대사관이나 한미연합사, 공군 등에 자료 협조를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기무사 존안자료 66권 중 10권은 5공 청문회 자료, 신문스크랩 등 기존에 나왔던 내용이 담겨 있었다"며 "지난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들도 열람했지만 받아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 기독병원서 나온 '5·18 탄환' 등 국과수 의뢰

수술 과정 서 나온 탄두 5점

광주시는 박주섭 전 기독병원 원장이 12일 기증한 1980년 당시 수술과정에서 나온 탄환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 의뢰하기로 했다.

박 전 원장은 1980년 당시 기독병원 외과과장으로서 부상자들을 수술하면서 적출한 탄두 5점과 탄환 조각 5점을 이날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기증했다. 또 현장조사를 위해 광주를 방문 중인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이하 '5·18 특조위')에도 출석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이번 기회에 5·18 진실이 철저히 규명돼 역사의 교훈으로 삼았으면 한다"하고 소감을 밝혔다.

시는 국방부 5·18 특조위가 박 전 원장이 기증한 탄환과 5·18기록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탄환 등을 국과수에 감정해주도록 의뢰함에 따라, 5·18 당시 사망자 시신 등에서 수습된 총알 파편과 실탄(탄두)을 포함해 국과수에 감식을 요청할 계획이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보관중인 탄두와 탄환은 ▲5·18 당시 사망해 옛 망월동 시립묘지 3묘역에 안장된 시신 9기를 1997년 국립5·18민주묘지로 이장하면서 습득한 총알 파편 17점 ▲2002년 무연고 분묘 11기에 대한 DNA검사 과정에서 습득한 총알 파편 3점 등이다.

총알파편 등에 대한 조사의뢰 내용은 '생산년도', '종류 및 크기', 사격 발사거리를 유추할 수 있는 '압축정도', '기타 1980년에 발포한 총탄과의 연관성 유무' 등이다. 시는 지난해 전일빌딩 10층 내부에서 발견된 탄환 흔적을 국과수에 의뢰해 올해 초 "헬기 사격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감식결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대한민국 정통성 인정하느냐?

국정감사장서 '사상검증' 논란

국감 현장

문재인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12일에는 여야 간 기싸움으로 1시간 이상 공전되는 상임위가 있었는가 하면 EMP(전자기펄스) 충격기로 휴대폰 먹통을 시연하는 이색적인 장면도 연출됐다. 또 정무위 국정감사장에서는 일종의 사상 검증처럼 보이는 질의가 나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국회에서 열린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여야가 신경전을 펼치면서 1시간 넘게 공전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산업부의 자료 제출 부실을 따지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더 심했다고 산업부를 두둔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어젯밤 10시 넘어 무더기로 제출했다"며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국감을 방해하고 물 먹이려는 짓"이라고 따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정부부처가 자료 제출을 안 한 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가 대표적이었다"며 "19대 국회 때 제 실명을 거론해서 자료 제출을 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도 "참여정부 때 국감에 제출한 자료량과 이명박 정부 이후 자료량을 비교해보라"며 "기본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자료를 의도적으로 내놓지 않는다는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두둔하고 나섰다.

이날 국감에서는 또 한국당 이채익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도중 국민의당 소속인 장병완 위원장이 "의사진행 발언과 질의는 구분해 달라"며 마이크를 끄라고 지시하면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무위**=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감에서는 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국무총리비서실 정현곤 시민사회비서관의 과거 전력을 문제 삼으면서 일종의 '사상검증'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정 비서관에게 "국가보안법으로 2차례 복역했죠. 20년 전, 30년 전이라서 그사이에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이해한다. 알아보니까 좋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그 단체, 그 당시에 활동했던 그 이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느냐"고 질문했고 정 비서관은 곧바로 "네. 당연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천안함은 폭침된 게 아니라고 이 책에 썼던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정 비서관은 "답변을 꼭 해야 하는가. 제가 학술적으로 쓴 논문에 대한 부분인데, 국감장이라서 어렵다. 제 생각을 알고 싶으면 그건 따로 보고드리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정 비서관은 2010년 천안함 폭침에 의혹을 제기하고 재검증을 요구하는 내용의 '천안함을 묻는다'를 공동 저술했다.

이에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국감장인데, 개인적 사상과 신념에 대해 조목조목 묻는 형식 자체가 국민 보기에는 제대로 납득이 안 될 수 있다. 과거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 시민사회 비서관으로 왔으면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현재 업무 결과로서 묻고 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소형 충격기로 EMP(전자기펄스) 공격을 시연해 눈길을 끌었다. EMP 공격은 전기·전자 기기를 망가뜨릴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강한 전자기파를 발생시켜 기기나 인프라를 파괴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수백km 상공에서 핵폭탄을 터뜨리면 순간적으로 엄청난 강도의 전자기파가 발생해 이를 통해 넓은 지역의 전자기기를 파괴할 수도 있다.

송 의원은 이날 국감 질의를 통해 "북한이 지난달 3일 6차 핵실험을 강행한 뒤 핵무기를 이용한 EMP 공격의 위력을 알렸다. EMP 공격에 휴대폰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겠다"며 시연에 나섰다.

송 의원이 손바닥 크기만 한 EMP 충격기를 휴대폰에 대고 작동시키자, 10여 초 뒤 휴대폰 화면이 꺼졌다. 그는 EMP 충격기의 출력을 높이면 국감장에 있는 사람들의 휴대폰이 모두 영향을 받으므로, 출력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의원은 전쟁 등 비상시에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하는 국가지도통신망에 EMP 차폐 시설이 없어, 북한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